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59-12 3층 T.02-778-4001. F.02-778-4006 pssp@jinbo.net http://www.pssp.org

2012년 8월 3주차 보건의료동향분석

2012년 8월 6일 ~ 2012년 8월 17일

주요 키워드

1. 국민건강보험공단 채신위원회 연구발표 : 국민건강보험공단 채신위원회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어 있는 가입자를,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하여 건강보험 가입자로 일원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현행 근로소득에 더해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80%가까이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5년간 37조원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밝힘
2.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리병원/비영리병원 동시 설립 방안 검토 :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둘러싸고 동시 설립이 검토되고 있음. 혼합형 의료복합단지로 건립될 경우 외국계 영리법인이 건립하는 국제 병원에는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고 건강보험 적용이 배제됨. 대신 비영리병원은 내국인 환자를 위주로 운영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됨. 그러나 이는 영리병원을 도입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시민단체 및 노동조합에서 반발하고 있음
3. 한국 BMS 노동조합 투쟁 : 한국 BMS 노동조합은 임금기준 명문화와 위장도급 불법파견 규탄 기자회견을 7일 한국 BMS 본사 앞에서 진행. 이 자리에는 다른 다국적제약기업 노조들이 참여했고, 제약산별노조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도 진행중. 현재 CSO관련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인데, 이에 대해 노동부에서 다음주에 결론이 나올 예정

1. 보건의료정책 및 직업단체 동향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관련 의료계 불만

지난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의료계내 약자인 전공의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우선 위에서는 당직은 못서겠다고 하며 가급적 콜하지 말라는 압박이 들어오고, 법 시행 이후 주 1회 있었던 오프도 없어진 곳이 많다. 또한 응급실 전담 의사로 근무하는 시간 동안은 병동이나 외래 환자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병동 당직을 새로 뽑아야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개정 응급의료법 시행관련 전공의 지침'을 통해 만약 응급실 온콜 당직표에 전공의가 기재되는 경우, 현재 응급의료법상에 전문의 당직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 된다고 경고했다. 또 인턴이나 전공의에 의한 응급실 초진 후 온콜 시 당직표에 해당하는 전문의를 콜하게 하지 않고 3, 4년 차 전공의 콜을 하게 하는 경우도 의료법 위반이라며 제도 악용 가능성을 경계했다. 또한 응당법 시행과 관련 3개월간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3개월 내 전공의들이 상급자의 압박으로 온콜을 하지 않고 진료를 직접 보아 적발됐을 경우 아무런 보호조치 받지 못한다며 우려했다.

○ 보건복지부, 건정심 개편 관련 정몽준 요구 거절

정몽준 의원은 최근 건정심의 합리적 위원 구성을 검토할 수 있는지 복지부에 서면 질의했다. 이 질의서에서 감사원의 시정 권고를 외면한 채 건정심의 불합리한 위원 구성과 부적정한 위원회 운영을 지속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합리적인 위원 구성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질의했다. 이는 포괄수가제 도입을 중재하며 의사협회와 약속한 건정심 개편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국내 건강보험 및 정책결정의 구조를 고려할 때 현 건정심 구조가 합리적이고, 공위위원의 위촉은 위원 개인의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해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복지부의 반응에 정몽준 의원 홈페이지에는 복지부의 오만함을 고쳐달라는 의사들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의협은 건정심 구조 개편안으로 독일의 연방의료심의위원회를 모델로 삼고 공급자 9인, 보험자 및 가입자 9인, 공익자 3인으로 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 2011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결과 발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일 발표한 이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소득계층별(보험료분위)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득을 5단계로 나누어 보험료부담 및 의료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세대기준으로 하위계층(1분위 20%)은 세대당 월평균보험료 2만485원을 부담하고 10만7824원을 급여비로 받아 5.3배의 혜택을 받았고, 상위계층(5분위 20%)은 세대당 월평균보험료 19만4466원을 부담하고 22만3595원을 급여비로 받아 1.2배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2008~2011년) 소득 5분위별 보험료 대 급여비 현황을 보면 하위 20%의 경우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2008년에 3.83배에서 2011년 5.26배로 증가했다. 적용인구 1인당 기준으로 보면, 건강보험료 하위계층은 1인당 월평균 보험료 1만3395원을 부담하고 급여는 5만9576원을 받아 4.5배의 혜택을 보았고, 상위계층도 보험료 6만4136원을 부담하고 급여는 6만8662원을 받아 보험료보다 1.1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 인체조직 수집 기관, 개인정보 수집 가능

제대혈이나 인체조직, 장기 등과 관련된 기관이 개인건강정보나 주민등록번호를 다룰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지난 9월 30일 개인정보 보호법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제정되었다. 시행령안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제대혈 기증 및 위탁 동의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각 개정시행령은 등록기관장, 채취의료인, 복지부장관 등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건강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했다.

○ 대한간호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의료법 개정안 관련 갈등

양승조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 6일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바꾸고 면허취득과 면허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80조는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간협과 조산협회는 반대 성명을 내고 의료계에 일대 혼란을 초래할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협회는 간호실무사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간호사와 혼동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알권리를 침해하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인력 양성체계를 위협하고, 값싼 인력을 이용하여 의료기간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무력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간조협은 한국도 미국, 캐나다의 LPN(Licensed Practical Nurse/실무면허간호사)에 준하는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과 의료법개정안 통과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낮게 평가되고 왜곡된 신분에서 본래의 신분을 찾기를 원하는 것이고, LPN에 준하는 신분을 유지해 많은 간호조무사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간조협은 공사립 대학에 2년제 간호실무사 과정을 허락하고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 간담회

보건의료노조는 8일 오후 서울 공군회관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사항에 대해 전달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인력문제의 심각성과 보건의료인력 지원특별법 필요성, 영리병원 도입 반대, 국립중앙의료원 법인화 이후 근본적인 대책 수립,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수익중심 운영평가 등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문재인 의원은 개선의지를 밝히며 의료 인력 확충을 통한 보호자 없는 병원 도입,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도입 반대, 지방의료원 수준 확충 등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지방의료원의 공공적 발전을 위해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후보는 현재 보건의료 선거 공약으로 양질의 50만 일자리 창출, 무상의료 실현, 공공의료 확충 등을 내세우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 보험료 부과체계 직장·지역가입자 단일화 통일 방안 발표

건보공단 보험료부과체계개선 TF 전용배 팀장은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쇄신위원회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원화돼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단일화를 추진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돼 있는 가입자를 건강보험 가입자로 일원화해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김종대 이사장 취임 후 발족한 쇄신위원회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것으로, 현재 보험료 부과체계가 보험료 부담의 평등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깔고 연구를 진행했다. 즉 현재 건보공단 제정이 통합되어 있지만 가입자간 보험료 부과체계가 상이해 보험료 부과소득 범위가 다른 등 비합리적인 요인이 많다는 것이다. 쇄신위가 도출한 부과체계 개선 방향은 직장·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구분된 자격관리를 하나로 통일하여 단순화,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3원화된 부과기준을 하나로 통일, 부과대상이 보수, 재산, 자동차, 성·연령에서 소득과 소비로 단순화하는 내용 등이다. 부과기반 확대를 위해서 현행 보수(근로소득)에 추가해 이자, 배당, 연금, 양도, 상속, 증여,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무임승차 논란이 있는 직장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와 직장·지역가입자를 건강보험에서 하나로 통합 자격관리함으로써 사회연대성을 제고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방안 연구 결과 도출

필수의료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8.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5년간 약 37조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쇄신위원회 보험료 부과체계 및 건강보험 보장성 연구에서 도출됐다. 건보공단은 소득수준 향상 및 건강에 대한 가치관 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가 분출되는 점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차상위 저소득계층 의료보장을 위한 본인부담률 경감, 재난적 의료비 부담해소에 필요한 본인부담상한제 기준액 하향조정, 필수의료중심 보장성 확보 등을 개선방안으로 마련했다. 또 선택진료비와 병실차액 등 보험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대다수 국민에게 과도한 비용부담을 유발하는 비급여 항목도 국민부담해소 및 제도 정상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급여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급여화의 우선순위는 저소득층 보장 강화/재난적 의료비 부담해소/병실차액 및 선택진료비, 비급여 중 필수부문 급여화, 간병서비스급여화/선택진료비는 2년 간 급여화, 간병과 현행 비급여 중 필수부문 급여화는 각각 3년, 4년의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급여화할 예정이다. 공단은 보장성 강화 항목들을 계획에 따라 단계적 급여화 시 건강보험 보장률은 연도별로 69%→72.5%→74.8%→77.1%→78.5% 수준까지 향상되며, 5년간 총 36조6000억원, 단계적으로 연 3조4000억~11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최종 목표보장률 달성시 입원 보장률은 약 85.1%, 외래 보장률은 약 72.8%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 대한 학계 비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함께 특정소비항목에 건보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학계는 일제히 우려의 소리를 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은 소비에 대해 건보료를 별도로 부과하겠다는 부분은 앞뒤가 맞는 논리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

비에 대한 부과는 재원 다양화 차원에서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연구위원도 부가세 인상과 건강보험재원의 직접적 매칭이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홍백의 교수는 소비에 부과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방법론적으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대토론회 자리에서 발표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통해 소득과 약의 불안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소득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소비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주세 등을 파악해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구상이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개원 4개월, 조정신청 140건 중 47건 개시

지난 4월 8일 출범한 의료중재원이 개원 이후 4개월 동안 총 1만3886건(1일 평균 169건)의 상담과 140건의 조정신청이 접수돼 47건이 개시됐다고 9일 밝혔다. 또 의료사고로 조정 신청이 접수된 건수는 총 140건이었으며, 의료기관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47건, 의료기관이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건수는 59건으로 의료기관의 조정절차 참여율은 약 44%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담건수에 비해 조정신청 건수가 적은 것은 법 시행일 이후의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재원은 10월 이후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이며, 피신청인(의료기관)의 조정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지속 마련한다고 밝혔다.

○ 34차 의료정책포럼, 합리적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방향 발표

이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은 10일 의협 동아홀에서 열린 '제34차 의료정책포럼'에서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개별 규정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가 피해자의 피해 구제에만 치중하고,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간에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는 시점은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하는 시점이 아니라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는 시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조정 개시 후 양 당사자의 임의탈퇴 불가, 조정 당사자 중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손해배상대불금의 재원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시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사자가 의료사고 조사를 위해 필요한 출석 진술, 자료 제출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한간호협회, 의료법 제80조 개정안 대응 행동

간협은 13일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제80조 개악 저지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주요 일간지에 게재했다.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은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하고, 간호조무사 면허신고제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간협은 호소문을 통해 중소병원의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부추기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법안이며, 의료양극화를 가속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보다 의료기관의 이윤추구를 위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법안이 중소병원 경영자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며, 병원노동자들에게 저임금 체계를 조장하여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내몬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향후 대응방안으로 각 정당별 대통령후보 경선뿐 아니라 올해 예정된 대통령선거에 30만 간호사와 7만 간호대학생의 정치참여를 공식선언하고, 대국민투쟁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14일 오후에는 천안역 서부광장에서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제80조 개악 저지를 위한 대국민대회'를 개최했다. 간호협회 측은 이날을 '양승조 의원 개악 법률안 저지의 날'로 정하고 양승조 의원의 지역구인 천안을 시작으로 제주에서부터 서울까지 전국 100만인 서명운동을 비롯한 집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201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발표

복지부는 전국 452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시설·장비·인력 법적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영역(54개 지표)과,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구조·과정·공공영역(26개 지표)으로 구성됐다. 그 결과 응급의료기관 중 41.6%가 법적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기관 264개소(58.4%)가 법적 지정기준을 충족했으며, 이는 2010년 충족률(48.2%)에 비해 10.2%p 향상된 수치다. 특히 지역기관의 필수영역 충족률(46%)이 낮았고, 권역센터(93.8%) 및 지역센터(86.6%)는 높았다. 세부영역을 살펴보면, 인력영역은 59.1%로 가장 낮은 반면 시설영역과 장비영역은 93.6%로 높게 나타났다. 응급의료서비스 질 평가는 권역·전문센터 및 지역센터 139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급성심근경색 환자에 대한 재판류 요법의 적절성'은 근 3년간 결과가 지속적으로 향상됐으며, '급성뇌혈관질환에서 뇌영상 검사의 신속성'은 2010년 21.8분에서 2011년 17.0분으로 4.8분 단축됐다.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중증외상 환자 등 3대 중증응급질환자의 응급실 평균재실 시간(중앙값)은 2009년 3.2시간, 2010년 3.1시간, 2011년 3.0시간으로 응급실 재실시간이 지속적으로 단축되고 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올해 219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지자체에 시정조치, 지정취소 등 관리·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잔존치·매복치도 노인틀니 급여 대상자 포함 결정

대한치과보철학회가 12일 세종대 광개토태관에서 개최한 보험틀니 연수 강연회에서 노인틀니 급여 대상자 '만 75세 이상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에 대한 자세한 기준이 제시됐다. 이 자리에서 완전 무치악 환자가 급여화 대상이지만 잔존치와 매복치 환자의 경우에도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는 밝혔고, 오버 덴처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당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임시틀니는 총의치 제작의 전제로 봐야 해 부분틀니를 고쳐서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안 되고 새로 제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임시틀니 2단계 실시 이후 환자가 내원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임시틀니 종료 후 수가 산정은 가능하나, 환자는 타 요양기관에서 급여 틀니를 제작할 수 없다. 또한 협진 및 특례비용 질환 환자가 보험틀니를 제작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세서 및 청구서를 분리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날 심평원은 기타 치과영역에서 7월 이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 병원군별 총정원제 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

오승택 가톨릭중앙의료원 교육수련부장은 13일 가톨릭 의과대학에서 열린 이 공청회에서 지난 10년간 시행했던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병원군별 전공의 총정원제는 대형 3차급 수련병원(모역할)과 중형 2차급 수련병원(지역할)이 하나의 병원군을 형성해 전공의를 공동으로 모집 선발하고, 공동책임하에 교육시키는 병원간 전공의 통합 수련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제도는 정부의 전공의 정원 감축정책과 수련병원의 전공의 인력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시행되었고,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지난 2003년부터 2차에 걸쳐 시범사업을 진행해 병원군별 총정원제를 산하 9곳 병원에서 외부병원까지 확대한 바 있다. 오승택 부장은 시범사업으로 전공의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와 병원을 배정할 수 있었지만, 전공의와 지도 교수의 책임감 저하 등과 같은 문제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병원별, 과별 특성을 고려한 주교육병원 제도의 활용과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전공의 수급과 교육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병원들로 병원군을 묶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현재 단일 병원 위주의 수련 관련 법령과 수련 실태조사를 병원군 체제에 맞도록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언주 민주당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계획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최근 살인과 시신유기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인 결격사유에 형법상 '사체 등의 영득'(161조), '살인, 존속살해'(250조) 등의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들 조항에 해당하는 중범죄자에게는 면허증을 재교부할 수 없도록 금지해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산부인과 의사의 시신유기 사건이 계기가 돼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사회가 의사에게만 고도의 윤리를 요구한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 대한의사협회,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선거인단 참여 독려

의협의 노환규 회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과 의사 커뮤니티 등을 통해 대선 후보 경선이 의사들의 정치적 역량을 정치권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그리고 후보자간 경합이 치열하고 정당가입 없이 신청이 가능한 민주통합당 경선에 참여하는 것이 의료제도를 변화시키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고 의협은 전했다. 이 같은 소식에 의료계 내부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 포괄수가제 논쟁 인터넷 게시물 관련, 법적 조치 진행

포괄수가제를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협박 문자와 폭언을 한 혐의로 유모씨 등 의사 8명이 17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6~7월 박민수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6월14~16일 인터넷 의사 커뮤니티 게시판에 박 과장에 대한 욕설을 올린 다른 의사 2명도 모욕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한편 의협은 일부 온라인 포털사이트 및 SNS 등에서 의사들을 비방하는 글을 집중적으로 게재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등 7명을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포괄수가제와 관련 논쟁이 오가던 중, 피고발인 7인이 게시물을 통해 의사 개인과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피고발인 중에는 건보공단 홍보실 직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내에서는 건보공단에서 예전부터 포괄수가제에 대한 조직적인 여론몰이를 해온 것 아니냐는 의견도 흘러나온다. 의협은 이번 검찰고발은 시작에 불과하며, 피고발인은 물론 이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 보건의료 산업과 기술

○ 미래형 치과산업벨트 구축을 위한 국회세미나 개최

대구와 광주광역시, (재)대구테크노파크 및 광주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이용섭 의원(민주통합당)·유승민 의원(새누리당)이 주최한 위 세미나가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되었다. 행사를 주관한 두 의원은 두 도시가 연계된 치과산업벨트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의 뜻을 나냈으며, 지식경제부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광주와 대구시가 추진 중인 치과산업벨트 구축 사업에 막판 힘이 실려, 8월 중순 기획재정부의 결과 발표에 청신호가 켜졌다. 사업기간은 2013~2017년까지고, 국비 1400여 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는 2000여 억원이다. '아시아-태평양 치과산업 허브 구축'이라는 비전을 내건 이 사업은 2018년 세계시장 점유율 8%, 해외수출액 7000억원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토론회의 참여자들은 이 사업이 치과분야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국가의 지원에 대해 호소하기도 하였다.

○ 송도국제병원 영리·비영리병원 동시 설립 논란

송도국제병원 설립방향을 두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을 동시에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영리법인이 세우는 국제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고 치료보다는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설립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진행돼 왔다. 영리병원을 찬성하는 측은 병원 수익 증대를 통해서 의료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영리병원 도입을 통해 의료기기나 바이오 제약산업 등 의료관련 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는 영리병원이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국민 건강과 의료까지 시장에 넘겨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국민건강보험 무력화, 의료비 상승, 의료 양극화, 지역의료 공동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비 폭등에 따른 의료서비스 양극화가 우려된다는 반대 측 논리를 잠재우기 위한 인천경제청의 교육책이라는 분석이다. 당초에는 외국계 자본 6000억원을 끌어들이어 존스홉킨스 병원과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600병상 규모의 국제병원을 세울 계획이었다. 혼합형 의료복합단지로 건립될 경우 외국계 영리법인이

건립하는 국제병원에는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고 건강보험 적용이 배제된다. 대신 비영리병원은 내국인 환자를 위주로 운영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한다. 송도 비영리 병원은 삼성·세브란스·아산 등 국내의 대표적 의료기관 중에서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건립 방안은 인천시에도 보고돼 현재 송영길 인천시장의 결심만 남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병원 허가절차, 외국인 의사 비율 등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이 오는 9월중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 장기세포, 현재보다 10배 이상 증산 기술 개발

일본의 한 바이오 벤처사가 사람 장기세포의 생산량을 현재보다 10배 이상 늘리는 방법을 개발하여 대량생산의 기반을 마련했다. 요코하마시 소재 리프로 셀사는 여러가지 세포에 변화할 수 있는 인공 다능성 줄기세포(iPS 세포)에서 제작하는 인간 장기세포의 생산량을 2년 후에 최대 10배로 늘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리프로셀은 iPS세포로부터 만든 줄기세포를 제품화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 율여름 모기 실종 원인은 '폭염'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5월 모기 발생이 급증했지만 지난달 8일~14일 말라리아 매개 모기 등 전체 모기 발생 수가 평년(2007~2011년) 대비 23.5% 감소했다고 밝혔다. 모기 실종 원인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방역활동의 영향도 있지만 날씨와의 연관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이 시작된 지난달 22일~28일 전체 모기 발생 밀도가 43.6%나 감소했다.

○ 기획재정부 2012 세법개정안 마련, 임상 1·2상·백신 R&D 비용 최대 30% 세액공제

기획재정부는 2012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여 올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기재부는 우선 올해 말로 끝나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 R&D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2015. 12. 31까지)했다. 세액공제 대상에 백신·및 1, 2상 임상평가 기술 등을 추가하여, 당해연도 지출액의 20%(중소기업 30%)가 세액공제된다. 중견기업의 R&D 비용도 세제지원을 받게 되어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율 8%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중간구간을 신설했다. 또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세면제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했으며, 이는 시행일 이후 비용 발생분 부터 적용된다. 제약회사 구조조정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 제약회사 간 합병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합병한 기업이 동일 투자설비 등을 갖고 있을 경우, 이중 하나를 양도하고 새로운 설비 등을 취득할 경우 처분이익을 과세이연(3년 거치 3년 분할 이익금납입)하는 것이다. 올해 말까지인 R&D관련 설비투자·출연금·기술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했다.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는 수령시 이익금으로 보지 않고, 지출시 손해금으로 보지 않는 내용이다.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투자금액의 10%의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면, 기술 취득금액의 7%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는 것이다.

○ 진흥원, 해외 사례 분석 통한 mobile Health 활성화 제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백승민 연구원이 13일 'mHealth 해외 사례 및 시사점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고령화로 인한 국민의료비 지출 증가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어 의료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모바일헬스 서비스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바일헬스는 스마트폰, PDA 등 모바일기기를 통해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 및 건강 관련 정보를 의미하고, 정보 통신과 보건 의료를 연결해 시공간에 상관없이 예방·진단·치료·사후 관리를 제공한다. 미국 의학계 연구에 따르면 당뇨 환자에 대해 모바일 헬스 솔루션을 활성화하면, 환자 당 연간 최대 1만달러까지 절약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약물순응도와 심혈관질환 및 정신질환까지 관리하는 모바일헬스 솔루션이 제공되고, 독일에서는 디지털 기기로 환자의 약물순응도를 평가해 약효가 없으면 제약사가 약값을 되돌려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료비 문제가 심각한 일본에서는 모바일 솔루션 코멧 케어(Comet Care)를 구축했다. 국내에서는 송파구가 원격 건강서비스를 선보이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혈압·체중·체지방·근육량·기초대사량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했으며, 분당서울대병원도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모바일헬스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보고서는 이어 관련 법제도와 표준화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고, 일반 진단기기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 병의원들의 허용 여부 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대안으로 규제 개선과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적절한 경제적 유인책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줄기세포 핵심 기전 발견, 산소농도 조절로 줄기세포 대량 분화 방법·기전 규명

서울대병원은 17일 순환기내과의 이세원, 김효수 교수 연구팀은 산소농도를 조절해 줄기세포를 효율적으로 혈관으로 분화시키는 방법과 기전을 규명했다. 줄기세포를 치료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정세포로 대량 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연구로 인한 줄기세포 치료 개발이 더욱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들은 마우스 배아줄기세포(mESC)를 저산소상태(hypoxia)에서 일정 시간 노출시킨 후에 분화를 시키면 혈관분화가 현저하게 촉진된다는 것과 이것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을 국내 최초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저산소 조건을 활용해 더욱 안전하고 용이하게 특정 세포를 대량 분화시킬 수 있으며,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심화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3. 제약업계 및 제약정책

○ 보건복지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구성 완료

진통을 겪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어 총 12명의 위원을 선정했다. 현재 식약청에서 의약품 재분류 회의 일정을 논의하고 있고, 늦어도 8월 말에는 의약품 재분류 확정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약심 의약품 재분류 소분과 위원회는 이해 당사자인 의사회나 약사회 관계자를 배제하고 학회 관계자들로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약품 재분류안 확정을 보름 앞둔 상태에서도 의약품 재분류 안을 심의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분과회의가 아직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약품 재분류에는 피임약 재분류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민감한 사안이 걸려있는데 한 두 번의 회의로 재분류가 결정될 경우, 형식적인 심의라며 수긍하지 않을 수 있다. 복지부의 중앙약심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회의준비와 위원들의 스케줄 조정으로 진행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 식약청 관계자의 전언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허가-특허연계제 시행 전 자구책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약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우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신약특허권자와 제네릭사 간에 체결한 계약을 공정위에 신고하는 내용을 약사법령에 포함시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신약특허권자와 제네릭사간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업계의 자율적인 공정거래관행 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 조항 중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포함되면서, 신약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한미 FTA 발표 후 3년간 유예된 상태다.

○ 식품의약품안전청, 글로벌 신약 개발 지원 위한 전문상담제도 시행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 연구개발에 대한 불확실성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제품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의약품 분야별 전문상담제도를 마련,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분야별 전문상담제도는 합성의약품, 생물의약품, 천연물의약품 중 분석방법이 확립되지 않은 신약을 대상으로 한다.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효력·약리·독성, 임상, 안정성 분야에 대해 상담이 실시된다. 평가원은 상담 요청이 있을 경우 식약청 내부 심사부서와 연구부서 전문가는 물론 외부 관련분야 전문가들도 참여해 개발단계에서 필요한 고려사항과 시험계획의 디자인 등의 적절성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상담신청 품목은 단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문하도록 하여, 연구계획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설계되어 최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초기개발부터 품목허

가(승인) 전과정을 지원하도록 했다.

○ 신약개발연구조합, 지식경제부 개량신약 사업단 선정

신약개발연구조합은 최근 지식경제부의 2012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바이오 분야 과제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순환계 질환 치료용 복합 및 체제기술 기반 저분자 개량신약 개발 사업단'의 총괄 주관기관으로 뽑혔다. 올해 초 지식경제부가 공모한 개량신약 개발사업단 주관기관에 선정된 조합은 정부로부터 5년간 100억원의 지원 사업비를 투자 받는다. 사업단은 신약조합을 중심으로 2개 세부주관기관으로 구성됐으며, 정부 투자 지원뿐 아니라 임상 중심으로 민간 투자를 받아 연구단계별로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서 세부주관기관이 된 대응제약과 한올바이오파마의 개량신약 개발이 주목되고, 두 회사는 5년 내 개량신약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단의 최종 목표는 5년 내에 저분자 의약품을 이용한 '혁신 글로벌 개량신약' 개발이며, 국내에서 개량신약을 발매하고, 이어서 글로벌 임상2a를 완료하거나 기술이전을 통해 글로벌 제약시장에 진출하는 것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쇠신위원회, 약제 급여 결정 구조 개선 방안 마련

건보공단은 의약품의 가격 결정 과정 중 급여 결정 단계에서 진행되는 경제성 평가를 공단의 약가협상 절차로 귀속시키는 방안을 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는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사후관리의 효과적 연계로 재정보호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심평원과 공단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약제비 관리 체계는 효과적인 약제비 관리를 저해해 약제비 수준을 적정화하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가격 관련 사항인 경제성 평가를 공단의 약가협상 절차로 귀속시켜 보험재정과 연계해 보험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결정도 신약과 마찬가지로 보험자가 관리함으로써 지출관리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도모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복지부가 받아들이면 등재를 신청하는 제약사들은 심평원 급여평가심의위원회에 경제성 평가를 제출하지 않고 공단에서 윈스톱으로 약제의 경제성 평가와 약가 결정까지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또 전국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의약품 유통·가격 청구와 관련한 현장방문 및 서류조사는 업무 성격상 보험자가 수행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치료재료는 보험자 중심의 가격결정 및 사후관리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신약과 같이 보험자가 공급자와 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도록 개선하고, 보험등재 이후에도 보험자가 급여·가격 등을 모니터링하고, 급여목록을 정비하며, 사용량과 연동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한국제약협회 등 3개 단체, BT 의약품지원액 확대 방안 정부 건의

한국제약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등 3개 단체장은 9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제약 강국 실현을 위한 제약 산업 육성·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3개 단체는 BT 연간 지원액(2조3000억원)의 6.4%(1499억원) 불과한 의약품분야 지원액을 2020년까지 2010년 BT분야 정부지원의 50% 수준인 1조1500억원까지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2015년까지 신약개발 및 해외 수출을 담당할 추가 인력 8193명이 확보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2013년 추진 인력 양성 사업 소요 예산 123억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제약기업 전용 해외 M&A펀드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국내·해외 VC 공동 1000억원(국내 600억원, 해외 400억원)을 출자해야 하며, 이를 위해 2013년 예산에 정부 출자금 200억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제품화 직전의 임상 3상 파이프라인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 한국소비자원, 키미테 사용 주의 당부

한국소비자원은 10일 휴가철을 맞아 멀미약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키미테 사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환각과 착란, 기억력장애 등 부작용 사례가 올해에만 13건이 접수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스코폴라민(Scopolamine)을 주성분으로 하는 키미테는 현재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지만, 심각한 부작용 문제로 전문약으로의 전환이 끊임없이 요구되던 약이

다. 소비자원은 키미테 성인용 제품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제약업계 새사업 진출 동향

유한양행은 지난 9일 국내 제약사 기업 중 최초로 본격적인 유전체분석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테라젠이텍스와 개인 유전체 분석서비스 판매를 추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개인유전체 분석 서비스인 '헬로진'의 상용화 및 유전자 맞춤형의학 패널을 검증하기 위한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물론 맞춤형약 신약개발과 바이오마커 개발 등 연구분야를 확대할 예정이다. 안국약품은 지난달 혈당측정기 전문기업 세라젠메디시스와 당화혈색소 측정기의 중국 내 공급 및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LG생명과학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개발 및 상업화에 성공한 뇌수막염 백신(유희브주)의 중국 의약품시장 본격 진출을 위해 중국 천진의약그룹과 중국내 백신 개발 및 판매, 라이선싱, 파트너십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추진키로 지난 7월 합의했다. 국내 제약사들은 합성의약품만으로는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 제네릭 의약품 위주의 수입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신흥 시장들을 선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4개 제약사 리베이트 수수 혐의자 행정처분 사전 통지

복지부는 제약사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자 중 300만원 이상을 수수한 국내 4개 제약사의 의약사 100여 명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는 작년 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최초 수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한 사건으로, 7월말 중앙지검이 제약사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를 복지부에 송부하면서 행정처분 절차를 개시한 것이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바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건일 제약 사건처럼 검찰에서 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미비한 상태로 명단이 넘어왔기 때문에 사후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리베이트 행정처분 대상자는 늘어가고 있고, 검찰의 자료 미비 등으로 행정처분을 미루고 있는 복지부가 어떻게 이들의 범죄여부를 일일이 조사하고 확인할지는 미지수이다.

○ 제약업계 상반기 실적 고전

12월 결산 47개 제약사의 2012년 상반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은 4조8543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7823억원) 대비 1.5% 증가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전체적으로 모두 하락했다. 상반기 영업이익은 2825억원으로 전년 동기(5133억원) 대비 45% 감소했고, 순이익은 2259억원으로 전년 동기(3671억원) 대비 38% 감소했다. 47개 제약사 중 영업실적이 증가한 제약사는 녹십자, 태평양제약 등 10여 곳에 불과했다. 이 중 녹십자, 휴온스 등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저가의약품과 필수약품 및 백신제제 등의 비중이 높아 일괄인하 타격을 적게 받았으며, 태평양제약도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매출 증가로 약가인하로 인한 실적 악화를 피할 수 있었다. 반면 국내 1위 기업인 동아제약 등 상위제약사뿐 아니라 중소 제약사 모두가 실적 악화에 시달렸다.

○ 보건복지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안 마련

개정안은 효율적인 안전의 심사를 위해 100명의 위원의 범위 내에서 위원을 임명·위촉하되, 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해 분과위원회 또는 소분과위원회에 복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효율적인 안전심사를 위해 위촉·해촉하는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비상임위원은 전문가단에서 위촉한다. 다만,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비상임위원에서 제척되어 안전의 당사자,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인 위원 등을 배제한다. 이뿐 아니라 분과위원회의 구성, 분과위원장의 선출, 분과위원회의 소집과 그 방법, 심의와 회의의 공개, 합동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문을 정비했다. 또한 연구위원 및 연구원 업무수행의 범위, 복무 등에 관한 사항 준용 규정의 변경, 연구비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보훈병원 1원 낙찰 관련 딜레마

중앙보훈병원의 의약품 입찰을 진행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최근 공정위에 1원 낙찰 의약품 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제약사들을 카르텔(담합)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도매협회와 제약협회 역시 보훈병원에

1원 낙찰 의약품을 공급하는 도매업체나 제약사들을 부당염매로 공정위에 고발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사안을 놓고 어느 한쪽을 인정하기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 실제 도매협회는 1원 낙찰 근절을 위해 1원 낙찰 의약품 공급하는 도매업체는 공정위에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누차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담합으로 본다면 1원 낙찰 근절을 위한 노력이 허사가 될 수 있고, 부당염매로 본다면 보훈공단근 제약사나 도매업체가 입찰을 진행하고 공급을 하지 않아 피해를 볼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빠르면 2개월 안에 결과가 나온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제약협회는 16일 1원 낙찰 의약품 공급하지 않은 것은 담합이 아니며, 건전한 유통질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 해외 인력 영입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방안 예산 심사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2차 심의를 진행했고, 8월말까지 몇 차례 심의를 진행한 후 채택되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기재부에 제출한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안, 인건비 지원 및 해외 수출기업을 위한 펀드구성을 토대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사의 해외 우수 인력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기재부에 요구해, 1명당 최대 1억원 지원을 요구했다. 그리고 해외 기업을 M&A하는 기업의 컨설팅비 지원과 펀드조성을 제안했다. 민관 매칭펀드로 정부출자금은 200억원이고, 예산이 확보될 경우 정부는 조성총액 및 분야별 투자비율 등 기본 가이드라인만 세운다. 이 같은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내년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남성 피임약 개발

16일 NBC방송, LA타임스, 데일리메일 등 영미 주요 언론은 호르몬을 사용하지 않는 최초의 남성 피임약이 미 하버드 의대 연구팀에 의해 개발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생명과학 분야 권위자인 셀(Cell) 최근 호에 발표된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쥐를 대상으로 이 신약을 투여한 결과, 쥐의 고환이 정자를 일정 기간 동안 생산 중단하는 것이 확인됐다. 정자 생산량이 89% 감소되었으며, 생성된 정자들도 운동성이 정상 이하로 떨어졌다. 약 투여를 중단하자 바로 생식능력이 되살아났다. 그간 남성용 피임약을 개발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었지만, 유방확대 증상 등으로 인해 포기한 상태였다. 이는 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에서 JQ1 분자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하던 중, 이 분자가 체내의 BRDT라는 유전자의 활동도 억제하는 기능도 있음을 알아낸 것이다. 이 약은 이후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이 입증되면, 본격적으로 실용화 될 것으로 보인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혁신형 제약회사 수출계약 현황 조사 착수

진흥원의 제약사 수출계약 현황 조사는 오는 9월 12~14일 열리는 '2012 Pharm Fair'에서 현재 상당부분 계약협상이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파트너사를 초청하고 기간 중 계약이 체결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최하는 이 행사는 UAE, 중국, 아세안, 폴란드 등 제약 신흥국의 의약품 인허가 담당 공무원 및 현지 유통 유통사를 초청해 진출 경험이 부족하거나 해당 지역 수출에 애로사항이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수출 활로 개척을 위한 행사다. 진흥원은 행사기간 중 혁신형 제약기업의 수출계약 체결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4. BMS 노조 투쟁

○ BMS노조 투쟁승리 연대 기자회견

한국BMS제약의 임금기준 명문화 및 위장도급 불법파견 규탄 및 정규직화 투쟁을 위해, 제약관련 노동조합 대표 10여명은 7일 오후 2시 한국BMS 본사 앞에서 'BMS노조 투쟁승리 연대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대표자들은 연대 성명서를 통해 임금인상과 그 기준을 명문화하자는 요구는

당연한 것이라며, 이를 외면하는 회사는 결국 조합원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그리고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설 것과, 회사의 위장도급 불법과건을 철회하고 즉시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노조 대표들은 이날 BMS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동반파업까지 거론했다. 이날 연대 기자회견에는 바이엘코리아노동조합,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노동조합, 사노피파스퇴르노동조합, 아스트라제네카노동조합, 줄릭과마코리아노동조합, 한국캠브로노동조합, 한국노바티스노동조합, 한국베링거인겔하임노동조합, 한국와이어스노동조합, 한국화이자제약노동조합, 한독약품민주노동조합, 현대약품노동조합영업지부, 대성산업노동조합 등의 대표자가 참석했다.

○ BMS 사측 노조측 주장 반박, CSO 직원 법적 절차 주장

BMS 관계자는 인벤티브 헬스코리아는 파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회사라며, 이 회사를 통해 배치된 CSO(Common Service Operation/제품 공동프로모션을 위한 서비스 계약) 직원들은 위장도급 불법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약가인하로 제약업체가 힘든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피하고 기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행된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CSO직원들이 BMS 메일 계정을 사용하는 것을 두고 노조가 문제삼는 것에 대해, 윤리규약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을 따지기 위해 메일을 만들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당 직원들을 BMS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고, 약의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만 진행했다고 전했다. 회사측은 향후 노동부의 조사에도 착실히 임한다는 계획이다. BMS는 지난해 10월 도급업체 인벤티브헬스코리아와 CSO 계약을 맺고, 영업사원 32명을 채용했다. 노조는 해당 직원들은 도급형식을 위장한 불법과건이라고 주장하며, CSO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7월 9일부터 준법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노조는, 노동부에 불법과건 고발장도 접수한 상태다.

○ BMS 의사 개인 정보 수집활동 법 위반 파문

BMS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노조는 회사가 실시하는 시장조사가 공정거래규약을 위반했다고 보고 제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BMS는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자사제품의 시장 선호도를 알기 위해 시장조사를 해왔는데, 영업사원들의 업무 행태, 의료기관에서 처방되는 의약품, 타 업체 거래내역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도 조사기관이 단독으로 해야 하는데 회사측에서 대상자 선정에 개입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고, 회사의 업무보고 시스템에 의사들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점도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보고 제소를 검토 중이다. 노조는 일단 민원을 넣어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보고, 법위반이 명백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BMS 노조, 임금인상 기준 쟁취 및 불법과건 2차 규탄대회

BMS노조(위원장 유대희)는 8일 오전 11시, BMS 본사 앞에서 60여명의 조합원과 화학연맹 산하 노동조합 대표자, 제약관련 노조대표자들이 참여한 위 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BMS의 불법과건 문제가 사회전반 및 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생각하면 당연히 전체 노동조합이 함께 연대해 초기에 파급력을 차단하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결의했다. 이들은 임금인상 기준 명문화와 불법과건 철회 및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회사가 노조의 요구에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며, 지난 8월 2일 개정된 파견법 시행에 따른 직접고용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꾀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제약사 노조들과 연대해 불법과건이 근절되는 날까지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했다.

○ 제약산별노조 연대 출범 준비

다국적 제약사를 중심으로 한 제약산별노조가 사용자와 교섭시 창구단일화를 목표로 일사분란하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전 제약산업을 대상으로 문을 개방할 예정이며, 도매업계와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산별노조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10개 다국적 제약사 노조는 이 산별노조의 명칭을 가칭 '민주제약노조'로 정했으며, 올해 안 출범을 목표로 최대한 빨리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들 노조는 회사측과의 교섭 문제에 대해 중점논의하고 있다. 산별노조의 목표는 공동교섭으로 사용자의 대표단이 나와 제약근로자 대 제약사용자의 정면 교섭을 하는 것이다. 특히 공동교

섭을 통해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여, 재무재표 등을 통해 경영 투명성을 분석해 수익이 직원에게 올바르게 분배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의 목적이 회사와 동반성장하여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현재 다양한 교섭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1원낙찰, 다국적 제약사의 유통저마진 문제 등을 제약군 전체의 문제로 보고 도매업체들과도 접촉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 다음주 한국BMS 사태 관련 불법파견 여부 결론

유대희 BMS노동조합위원장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오는 24일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고발한 불법 파견 조사 결과를 고지할 예정이다. 불법 파견일 경우 노동부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지도를 할 계획으로 보이고, 노조는 이후 대응책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노동부로부터 회사측에 혐의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회에까지 가져가 공론화할 계획이다. CSO가 비정규직 전환 확대를 위한 수순이기에 공론화를 시키고, 현재 화학연맹에서 국회 공론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편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들은 BMS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약업계에 일반화되지 않은 영업사원의 CSO식 채용이 BMS 사태로 표면화되면서, 비정규직 확산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다.